

# 쫄·盧 단죄의 칼날 다시 세워 '5·18 왜곡·폄하' 뿌리 뽑는다

‘전·노 기소 검사’ 법률대응단 임성덕 변호사

‘전·노 단죄 판사’ 법률대응단 이충상 변호사

### “광주 넘어 대한민국 정부·군대 모욕 정당한 일·사명감 있어 기꺼이 참여”

“정당한 일이고, (호남 출신으로 서) 사명감도 있어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하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임성덕(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인 지난 1995년 11월부터 1997년 4월까지 무려 1년7개월간 12·12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전두환과 노태우를 수사해 내란 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런 그에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폄하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는 23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일과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며 “광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를 모두 모욕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무안 출신인 그에게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수사도 의미가 컸다. “아마 단일사건으로는 최장기간

수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임 변호사는 “거의 매일 날을 새면서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고 덧붙인 그는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신군부의 내란 행위와 내란목적 살인은 법적으로 이미 단죄가 내려진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시 24회로 검찰 내 특수팀이었던 임 변호사는 인천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서울고검 검사와 수원지검 특수부장,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수사·공판 기록 어디에도 ‘복합’ 없어 피해자에 또다른 악행 좌시하면 안돼”

“광주시민은 피해자이고, 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망연수준의 자극적인 말들이 인터넷에 퍼돌고 시청률만 올리려는 종편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법률대응 변호인단 참여를 결정했다”며 “다른 곳에 있지만 변호인단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당시 재판 상황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엄치 없었던 전두환과 노태우씨가 법정에서는 (일반 피고인과 같이) 고분고분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민사지법, 광주지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판사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06년 서울에서 개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정에선 고분고분했던 쫄·盧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태와 관련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996년 8월 수의를 입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서로 손을 잡고 기립해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일베’ 광고중단 철폐 맞고도 5·18 왜곡 여전

TV조선, 북한군 개입설 사과

광주시가 “자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일간베스트(일베) 등 보수 인터넷 사이트에는 5·18을 왜곡하고 호남을 조롱하는 글·사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한 게시물을 올려 물의를 빚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모든 광고가 중단되고 종합편성채널도 사과 방송을 내보냈지만 일베 사이트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보수 인터넷 사이트 ‘일베’ 게시판에는 5·18을 폄하하고 호남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다.

“빨갱이××”는 아이디를 쓴 누리꾼은 “군인한테 총질한 게 민주화 운동이라니”라는 글을 버젓이 올렸고, “순상%물론××”는 누리꾼은 게시물에 “LA폭동 하고 5·18 차이가 대체 뭐냐 흥어에게 묻고 싶다”고 남겼다.

또 ‘안랩 때문에××’라는 누리꾼이 ‘518이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월××’는 ‘5·18 공식적으로 뒤집혔음 좋겠다’고 하는 등 왜곡·비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역사 왜곡 등의 문제가 커지면서 ‘일베’에 붙던 광고는 22일 중단됐다. 네이버 ‘새부’의 운영진은 지난 22일 오후 ‘일베저장소 운영진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에서 “특정 게시물·댓글 탓에 언론 매체 등의 주

목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게시자 정보 요청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진은 이어 “본의 아니게 오늘 10시간 만에 모든 광고가 중단됐지만 초심을 잃지 않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일베 사이트 광고대행을 맡았던 ‘리얼클릭’은 같은 날 공지사항을 통해 “제휴매체 일베에서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유해 정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 광고주와 인터넷 유저를 보호하기 위해 리얼클릭 광고 노출을 차단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

렸다. 5·18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여과 없이 보도한 TV조선도 전날 채널 A에 이어 사과방송을 했다. TV조선은 이날 ‘5·18 북한군 개입설 진실’을 밝힌다’라는 방송을 통해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한 뒤 논란을 일으킨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 장성민씨가 사과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채널A도 전날 해당 프로그램과 종합뉴스를 통해 사과방송을 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화운동 부인·왜곡하면 형사처벌

민주당 김동철 의원 법률안 제정 추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및 모욕이 도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사진)은 23일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발의될 법률안은 5·18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를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의 국권침탈 행

위나 친일 반민족행위, 내란죄 등 헌정 질서 파괴범죄, 국제협약에 따른 집단살해 등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우익들의 잇따른 망언으로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 국내에서까지 일본군 위안부를 ‘원정녀’로 비하하고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는 사례가 있어 참담하다”며 “5·18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이를 부인하고 왜곡·날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노태우 추징금 환수 길 열렸다

법원, 동생 재우씨가 관리한 차명주식 매각 결정

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TF구성 대책 마련”

검찰이 법원 결정에 따라 노태우(81)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추징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A씨와 B씨 명의로 보유한 兩오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해당 주식을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팔아 현금화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1999년 재우씨를 상대로 추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88~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재우

씨에게 120억원을 건네며 대신 맡아서 관리해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을 뺀 총 70억원을 재우씨가 검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2001년 확정했다.

주식압류명령을 받아낸 검찰은 2011년 매각명령 신청을 냈으나 A씨 등이 압류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결정이 늦춰졌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대검 청사에서 열린 주재간부회의에서 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 사안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습스

향기, 사랑, 그리고 꿈

# 제3회 곡성 세계 장미축제

INTERNATIONAL ROSE FESTIVAL GOKSEONG

2013. 5. 24(금) ~ 6. 2(일) / 10일간

● 장소 : 섬진강기차마을

천만송이 세계 명품장미,  
그 향기 속으로...

곡성군  
GOKSEONG COUNTY